

선박재활용법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24
----------	------

발의연월일 : 2024. 11. 20.

발 의 자 : 조경태 · 이현승 · 서천호
곽규택 · 박상웅 · 김태호
정성국 · 유용원 · 엄태영
권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2009. 5.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이나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사고 및 상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재활용협약을 채택하였음. 동 협약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과 이를 해체하는 선박재활용시설을 대상으로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전주기 동안 보건과 환경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을 담고 있음.

2023. 6. 26. 동 협약은 발효 요건인 비준국 15개국, 선복량 40퍼센트, 선박재활용실적 3퍼센트가 충족되었으며 이로부터 2년 후인 2025. 6. 26. 전 세계적으로 발효될 예정임.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이사국으로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선박의 국제운항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선박해체 시에는

국제기준에 따라서 선박재활용시설에 적법하게 인도될 수 있도록 동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박재활용협약의 본문, 부속서, 부록 및 결의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국내법 제정을 통해서 반영함으로써 협약을 준수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과 그 선박을 재활용하는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해양사고 수습의 목적으로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할 때는 적용하지 않도록 대상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선박의 경우 유해물질목록을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 또한, 선박을 재활용하는 경우 인증받은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하여야 하며, 폐기물 등의 최소화 조치와 출입 및 작업안전 조치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선박재활용시설의 경우 선박재활용시설 계획서를 갖추어 기준에 따라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선박재활용 계획에 따라서

선박을 재활용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이 법에 따라서 적합하게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출입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필요시 개선명령 등을 하여 행정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0조).

선박재활용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 장비가 해체되거나 예인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현존선”이란 신조선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3. “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가. 2025년 6월 26일 이후에 선박 건조 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 나. 건조 계약이 없는 경우, 용골거치나 이와 유사한 건조 단계가 2025년 12월 26일 이후에 있는 선박
 - 다. 2027년 12월 26일 이후에 인도가 이루어진 선박
4. “충톤수”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충톤수를 말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같

은 항 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5. “선박소유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용선자

나. 선박재활용시설에 선박을 매매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만 선박을 소유하는 자

6. “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유해물질목록”이란 선박 및 선박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8. “선박재활용”이란 유해물질에 주의하여 선박의 구성요소 및 재료를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보관 및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별도의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추가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9. “선박재활용업자”란 선박재활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임차인을 포함하여 선박재활용시설의 소유자로부터 선박재활용에 대한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한 그 밖에 법인 또는 사람을 말한다.

10. “선박재활용시설”이란 선박재활용을 위한 장소, 작업장, 시설로서 정해진 구역을 말한다.

11. “관할수역”이란 다음 각 목의 수역을 말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
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
다.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
타적경제수역

12. “현장조사”란 인증심사 등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에 명시된 선박
재활용시설의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13. “유조선”은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
약」(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것을 포함
한다) 부속서 1에서 정의한 석유를 산적운반하는 유조선 또는 부
속서 2에서 정의한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는 유조선을 말한
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과 그 선박
을 재활용하려는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항
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에서 수리 등을 위하여 일
시적으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② 대한민국 선박 이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이 대한민국 관할수역
에 입항하거나 입항 예정인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8조제1
항,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3조, 제25조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함 및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법은 해양사고로 인하여 선박의 침몰 또는 좌초 등이 발생한 경우, 해양사고 수습의 목적으로 해당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할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박재활용업자는 해당 선박 또는 선박재활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유해물질을 포함한 물질을 수거·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② 선박재활용업자는 선박재활용 시 선박 또는 선박재활용시설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른다.

③ 선박재활용업자는 해당 선박 또는 선박재활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다.

제5조(국제협약과의 관계)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경우, 국제협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국제협약의 요건보다 강화된 요건을 포함하는 경우,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국가의 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재활용에 의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 및 제거하고, 선박의 운항 수명 동안

선박 안전, 사람 건강, 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선박재활용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국제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에 기여하는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실현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이 이 법에 준하여 선박재활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선박의 유해물질 관리 및 선박재활용

제7조(선박의 유해물질 규제 등) 누구든지 선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설비 등을 설치 및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유해물질목록) ① 선박소유자는 제2조제6호의 유해물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목록을 작성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검인을 받은 유해물질목록을 선박의

모든 운항 기간 동안 적절하게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유해물질목록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선박재활용을 위한 준비 등) ①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선박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선박재활용시설 또는 국제협약 당사국인 외국정부가 제16조에 따른 인증과 유사한 행정처분을 한 선박재활용시설

2. 제19조에 따라 승인된 선박재활용 계획에 기재된 선박재활용시설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재활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 선박이 선박재활용시설에 들어가기 전 선박 안에 남아 있는 화물 잔류물, 연료유, 폐기물 등의 수량을 최소화하는 적절한 조치

2. 유조선의 경우 선박재활용시설에 도착하기 전 선박의 화물탱크와 펌프실 등의 출입을 위한 안전, 열작업을 위한 안전 또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준비

3.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보유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박재활용 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모든 선박 관련 정보를 선박재활용업자에게 제공

제10조(정기검사)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13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임시검사) ① 선박소유자는 유해물질목록에 영향을 미치는 선박시설 및 설비를 변경·교체 또는 중대한 수리를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의 검사기록에 그 검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최종검사)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의 재활용이 시작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최종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최종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9조제8항에 따라 선박재활용업자가 선박재활용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최종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13조(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①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②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의 유효기간을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유효기간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기산(起算)하는 기준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⑥ 임시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해당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의 효력이 정지된다.

제14조(국제협약 당사국 간 증서의 발급) ① 선박소유자가 국제협약 당사국인 외국의 정부로부터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 및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 당사국인 외국의 정부로부터 그 국가의 선박에 대한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 및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이 법과 국제협약에 따른 검사 후 해당 선박의 소유자에게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 및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 및 국제선박재활

용준비증서는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발급한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 및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로 본다.

제15조(선박재활용의 시작 및 완료 통지)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재활용 계획상 시작일 전 30영업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선박재활용업자는 선박재활용을 위하여 선박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박재활용업자는 재활용할 선박에 대한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가 발급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재활용의 시작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선박재활용업자는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선박의 재활용이 완료된 경우, 14영업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선박재활용시설

제16조(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등) ① 선박재활용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재활용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선박재활용업자는 제1항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선박재활용업자는 제1항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재활용시설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고 인증심사에 합격한 선박재활용업자에게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선박재활용업자는 제1항의 인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박재활용시설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현장조사 결과 제2항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에 관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① 제16조제4항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선박재활용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의 유효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령의 정하는 시기에 중간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유효기간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영업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 갱신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선박재활용시설 인증의 취소 등) ① 선박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 및 제5항의 인증, 제17조제3항의 갱신, 제19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16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근로 안전 또는 환경 보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선박재활용시설은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의 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 등) ① 선박재활용업자는 해당 선박의 재활용을 시작하기 30영업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재활용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선박재활용업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안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 승인 처리 기간을 10영업일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승인을 한 경우, 선박재활용업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재활용 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 사실을 해당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⑧ 선박재활용업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선박재활용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박재활용 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재활용 계획이 미흡하거나 그 계획대로 실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4장 감독

- 제20조(출입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와 현장 등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목적·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물질목록이 제8조에 적합하게 작성 및 유지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선박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선박을 계속하여 항해에 사용함으로써 유해물질의 유입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선박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유입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항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선박재활용시설의 운영에 있어 위반 사항이 식별되었거나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그러한 위반을 통보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조사하게 한 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선박재활용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항만국통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관할수역에 입항하거나 입항 예정인 총톤수 500톤 이상의 외국선박의 유해물질목록 및 그 밖에 증서가 국제협약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항만국통제를 위한 확인·점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한정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국제협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근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유효한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 또는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확

인

2. 유해물질목록에 대한 검사

3. 제1항에 따라 국제협약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선내육안검사 등 필요한 조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의 결과 제2항 단서에 따른 명백한 근거가 있거나 유효한 검사증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이 국제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출항정지·이동제한·시정요구·추방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항만국통제의 결과 국제협약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박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때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사증서 등을 발급한 국가의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정밀한 점검·선박의 출항정지·이동제한·시정요구·추방 등의 명령(이하 “시정명령등”이라 한다)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등을 받은 날부터 90영업일 이내에 그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정명령 등의 위법·부당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60영업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영업일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시정명령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① 선박소유자는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 시 선박의 결함이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되는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의 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선박명·총톤수, 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보고 의무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선박 관련 유해물질 등 정보, 선박의 상태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재활용업

자에게 선박재활용 실시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검사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목록의 검인
 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 및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발급 및 검사결과의 표기
 3.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4.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5.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
- ② 제1항에 따른 협정 기간은 5년 안으로 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차질에 따른 조치 및 대행업무의 대행취소 등 그 감독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25조(외국정부 등이 행한 검사 등의 인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의 해당 소속 국가에서 시행 중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법령이 이 법의 내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정부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선박에 대하여 행한 선박의 검사 등 업무는 이 법에 따른 검사 등 업무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등이 검사 등 업무를 행하고 발급하거나 표시한 증서 또는 합격표시는 이 법에 따라 발급하거나 표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증서 또는 합격표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외국정부등이 발급하거나 표시한 증서 또는 합격표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목록의 검인 또는 재검인을 신청하는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자

4.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5.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6.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7.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② 대행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대행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입은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명령등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명령등을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선박재활용 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에 보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선박재활용시설에 관한 정보

2. 연간 선박재활용의 발생량

3. 연간 선박재활용의 처리 실적

4. 위임 또는 위탁된 조직이나 감사원과 그의 의무 및 권한

5. 법 위반과 관련된 정보

6. 선박 또는 선박재활용시설에 취해진 조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의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물질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2. 제8조제3항 또는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선박소유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재활용한 선박소유자
 4.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선박재활용업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승인을 받은 선박재활용업자
-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의 특례)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벌금형만을 과한다.
-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유해물질목록을 유지 및 관리하지 아니한 선

박소유자

2. 제8조제3항에 따라 유해물질목록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소유자
 3.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4.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았으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5.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지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6.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지 아니한 선박 재활용업자
 7.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을 지키지 않아 외국 항에서 출항정지를 받은 선박소유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 및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현존선은 이 법이 시행된 후 2030년 6월 26일 이전까지 제10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존선이 2030년 6월 26일 이전에 재활용되는 경우, 재활용되기 전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유해물질목록의 확인) 이 법 시행 전에 국제협약에 따라 유해물질목록의 검인을 받은 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